

## 여당 비협조로 ‘북한인권법’ 사문화… “북한인권 악화됐다”

11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제330차 화요집회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통만사(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한변), 올인도, 국회 아시안권의원연맹(회장 김기현) 주최로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2014년 10월부터 한변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화요집회가 이날 300회를 맞았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5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 거부로 재단 출범은 지금까지 8년째 지연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여당 몫으로 할당된 북한인권재단 추천 이사를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 이사장 김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태훈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최종판결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북한인권 상황은 악화됐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라 주민들은 끔찍한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청년 군인을 라우 전쟁에 투입 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에 따라 청년들의 통일 염원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통일 필요 응답은 각각 22.4%와 23.9%에 불과했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 운동은 더욱 요구된다. 북한 동포를 구출하

는 일은 우리의 정의로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아진 측사 순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전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인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여러분의 활동이 북한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속히 재단이 발족해 북한주민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은



김태훈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문제”라며 “라우 전쟁을 보면서 북한인권이 개선됐다면 북한은 청년들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증대된다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만행이 멈춰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고 했다.

장대철 한정회장은 “북한의 3대 악법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



발제자들 모습. 이영현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양문화어보호법이다. 북한의 인권 탄압 이유는 체제 유지 때문이다. 즉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민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개러”라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부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라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막았다”며 “진짜 반국가세력들은 2,3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이아진 이날 발제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탈북 청년들의 증언 등으로 꾸러졌다. 이영현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인권 개선에 큰 동력이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또 북한에 라디오 방송 등 정보를 계속해서 유입해 주민들의 의식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문제”라며 “한국 시민사회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초중고와 대학교에 북한인권 관련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교두보인 탈북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총장·교수도 어긴 원칙, 왜 ‘탄핵 반대’ 학생들에게만?” 장로회신학대학교 연일 논란

학교 측, 최근 ‘협박’ 주장 반박했지만 오히려 “이중적” 비판 받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앞두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학교 측이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이 해명했지만 오히려 “이중적”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탄핵 반대 학생들 협박’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본교는 학

문의 자유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학교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탄핵 찬성이나 반대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하고 학생을 지도해 왔다”며 이것이 탄핵 반대 집회를 교내에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해당 집회 포스터에서 ‘학교 로고’ 등 표기를 삭제할 것을 안내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는 탄핵정국에서 학교 정문 밖 외부 공간에서 갖는 집회이지만 학생들이 평안한 집회를 갖고, 타 대학에서 일어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 해당 보직교수가 교수 단독방에 집회 사실을 알리면서 당일 학생 지도에 만



지난해 12월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시국선언문’에 첨부된 사진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 실명(교수 단독방에서) 공개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

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탄핵 찬성이나 반대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 입장에 대해 이 학교 김철홍 교수는 “그렇다면 왜 장신대 교수평의회는 작년 12월 13일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건가”라고 물었다.

당시 장신대 교수 65명은 “장신대 교수평의회 일동”명으로 낸 시국선언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과 직무정지를 요구한다”고 했었다.

김철홍 교수는 ““학교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학생들에게는 추상과 같이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교수님들 자신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신대 김운용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칼럼을 지난해 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것에 대해서도 ““학교가 특

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이란 원칙을 위반하고 계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외부인들이 장신대 공동체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탄핵 반대) 학생들에게는 학교 로고조차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어길 시에는 징계하겠다고 말하면서 교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장조차 자신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장신대라는 ‘공간’ 안에서 여과 없이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시국선언문’이 올라왔고, 여기에 첨부된 사진에는 장신대 로고가 있는 것밖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학교 밖에서’ 장신대 로고와 학교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특정 정치적 입

장을 표명하는 건가”라며 “만약 학교가 미리 인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서명한 이들 중 재학생은 학교에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은 학교 로고와 학교 이름을 쓰면 징계하겠다고 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징계하지 않는 게 학교의 실제 정책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때문에 그는 “학교 총장도 지키지 않고, 교수들도 지키지 않는 ‘학교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라’를 왜 굳이 이번에만 이토록 엄격하게 탄핵 반대 특별기도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지키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신대 학생들은 1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장신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잠실의 중심, 잠실시그니처 오피스텔 분양

2·8·9호선 잠실트리플 초역세권!!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의 똑똑한 오피스텔 소유로 든든한 노후보장!!

**즉시입주(현재 입주 중)**  
**잠실 2억원대 마지막 기회!!**

롯데월드타워  
잠실시그니처 오피스텔

2.8호선 도보8분  
8호선 도보2분  
9호선 도보1분

올림픽공원

주택수 미포함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가치상승

### 2억원대 초특가 한정

**회사 보유분 20실 특가 혜택!!**  
**- 주변 시세 대비 파격적 가격 특별공급**

**마감 임박**

**월세보장-투자만 하세요**  
계약과 동시에 매월 월세가 내 통장에 따박 따박~!

**트리플 초역세권**  
9호선 한성백제역 도보 1분,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2분, 2·8호선 잠실역 도보 8분

**초특급 문화생활 인프라**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시그니엘타워, 백화점, 롯데월드, 한강공원, 송파구청, 아산병원, 송파초, 방이중, 잠실중·고, 방이역자갈목, 송리단길

**풍부한 임대 수요·투자 가치**  
롯데타워, 제2코엑스, 삼성SDS, 현대GBC, 쿠팡, 무정법조타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한미약품, 유니온제약, 송파구청, 방이역자갈목

**잠실 시그니처만의 특화설계**  
강남 2억원대 오피스텔 소유의 마지막 기회  
원룸, 1.5룸, 1.5룸 복층 등 최신 트렌드와 젊은 강성을 반영한 특화 설계, 계약과 동시 입주, 임대 수익 발생

**전세대 풀옵션 무상설치**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인덕션, 비데, 전자레인지, 불박이장 등 무상설치

◆신청계좌 : 신청금 100만원(미계약시 전액환불) 농협 301-8832-9958-41 위원건설(주)

분 양  
문 의 **02)420-8003**

◆시행사:(주)코리안신박  
◆시행사:(주)위원건설  
◆대량대행사:대한씨엔엘(주)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9-9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 2층  
(총 107실 | 오피스텔 96실(단층: 72실, 복층: 24실) | 근린시설 11실)